

# 광주법정 기소장 2002년 출처 민변 기 소 장

## ■ 전 문

1979년 10월, 온 국민에게 침묵과 굴욕만을 강요했던 유신독재의 아성이 일거에 붕괴된 후, 가장 극악한 탄압과 박해에 맞서 왔던 우리 국민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자유와 인간다운 생존을 위하여 민주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며 1980년 민주화의 봄을 불러왔다. 그러나 한국 정치발전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던 미국은 막 뒤에서 우리 국민의 민주화 행진을 난동행위라 매도하며 친미정권의 수립을 꾀하였고, 12.12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령 확대와 민주인사 체포 등 강경조치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며 제2의 유신독재를 세우려 광분하였다. 광주의 애국시민들은 용납못할 미국과 신군부의 반역행위를 분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으나,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한 전대미문의 무차별한 살육으로 대답하였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열흘 동안이나 해방광주를 일구며 한 몸이 되어 잔혹한 학살극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미국과 신군부의 연합진압작전에 의해 무참히 도륙당하고 말았으나, 광주의 희생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모든 지향의 젖줄기가 되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 1987년 6월 항쟁을 꽃피우고 군부독재 종식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살인자를 단죄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광주를 짓밟고 권좌에 올라 철권을 휘두르며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를 법정에 끌어내어 내란과 살인집단으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은밀하게 신군부와 공조하여 광주학살극을 공연하였던 미국의 범죄행각은 우리 국민의 끈질긴 광주학살 개입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에 가리워진 채 단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광주의 유혈사태에 관여한 바 없다며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당시의 책임자들을 시민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애국시민의 유혈로 종식된 광주항쟁이 남긴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이다.

이에 본 검사단은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현장>에 기초하여, 한국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신군부와 뜻을 같이하여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들과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광주학살의 진실을 은폐한 미국을 이 법정에 기소함으로써, 민족자존을 회복하고 자주권을 다시 세워 민족의 앞날을 우리 힘으로 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피고인

1. 제임스 얼 카터, 1980. 5. 당시 미국대통령  
James Earl Carter, Jr., 39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  
William H. Gleysteen, U.S. Ambassador to Republic of Korea
  
3. 존 아담스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미8군 사령관  
John Adams Wickham, Jr. Commander in Chief of United Nations Command 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Eighth United States Army
  
4. 헤럴드 브라운, 당시 미 국방장관  
Harold Brown, Secretary of Defense
  
5. 스탠스필드 터너, 당시 미 중앙정보국 국장  
Stansfield Turner,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Agency
  
6.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Zbigniew Brzezinski, National Security Advisor
  
7. 워렌 크리스토퍼, 당시 미 국무부 차관  
Warren Christopher, Vice-Secretary of State
  
8. 리처드 홀부르크, 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Richard Holbrook,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and Pacific

■ 적용조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헌장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제2항 제1호, 제2호	집단살해죄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	인도에 반한 죄
제3조 제1항	개인의 형사책임

미국에 대하여,

헌장 제2조 제4항 제1호, 제2호	내정간섭행위 등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국가의 책임

## ■ 범죄의 배경

### 1.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및 대한반도전략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열강이 몰락하고 전승국인 영국, 프랑스가 전쟁 피해로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이, 미국은 군수산업의 번영을 기초로 자본주의 진영 최대의 군사적, 경제적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정치·경제·군사적 지배력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비밀정치공작을 벌였다. 특히 제3세계 나라들을 사회주의 권의 세력확대를 막는 방패막이로, 또 무제한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민주적 정권 수립을 방해하고, 선거로 집권한 반미성향의 민간정부에 대하여는 경제봉쇄 및 게릴라에 대한 무기지원·육성, 내전유발의 방법으로 전복을 기도하였다. 나아가 파나마 등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하여 직접적 군사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36년간의 엄혹한 일본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피어린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우리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 염원은 아랑곳없이 한반도를 자신의 세계제패전략의 전초기지로, 대소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땅의 허리에 38선을 긋고 군정을 실시하고, 일제 통치기구를 온존시키며 친일파를 비호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일체를 유엔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이양받고, 전후 한국을 대소전진기지로 틀어쥐고 수 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각종 핵무기를 배치하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한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남한을 자신들의 군수시장 및 상품시장으로 만들었다. 일제 관동군 장교였던 박정희는 1961년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후 굴욕적인 대일수교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안정화하고,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는 등 미국의 대한 정책 및 제3세계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미국은 독재정권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1979. 10. 26. 박정희가 피살된 후, 국민들의 민주화열망이 솟구쳐올랐으나, 이에 아랑곳없이 미국은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한국에서 안정적 친미정권을 수립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 2. 70년대 후반의 세계 정세와 한반도 주변 상황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세계 동시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미국 달러가치의 하락은 미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고, 1970년대 후반 계속된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성장은 미국의 정치적 주도권을 위협하였다. 1975년 베트남사회주의정권 수립으로부터 시작된 물결은 칠레 아옌데 인민연합정부 수립, 니카라과아 혁명을 거쳐 1979년의 이란혁명과 아프가니스탄 좌익정권 수립,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에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보다 강경한 친미정권을 제3세계에 수립해야 한다는 전략적 과제를 미국에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인권과 도덕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카터 행정부는 집권 초기 제3세계에 대한 군사적 개입 대신 외교에 의한 관리정책을 펴기도 하였으나, 집권 후기 이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을 거치면서 1980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포함하여 그 어떤 수단도 모두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며 강경군사노선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돌파구로서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급성장한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배력은 최대로 유지하는 한편 소련의 영향력확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유신체제가 야만적 폭정을 더해갔으나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의 요구는 막을 수 없는 힘으로 확산되어갔다. 부산, 마산에서 유혈 탄압을 서슴지 않았던 유신독재가 민중의 전면적 저항의 분출에 맞부딪혀 그 비극적 종말을 예견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울린 몇 발의 총성은 유신의 심장을 제거하였다. 한국이 ‘제2의 이란’이 될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안도한 미국은 박정희 이후 일시 권력진공상태에 처한 지배체제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친미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나서기 시작하였다.

### 3. 12.12 군사반란과 미국의 방조

#### (1) 10.26 직후 국내 지배집단의 대응

1979. 10. 26. 박정희 피살 이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무런 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교란사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 27. 계엄포고령 1호를 공포하여 집회의 사전허가, 시위금지, 언론·출판의 사전검열, 야간통행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금지, 유언비어 유포금지, 항만과 공항 출입의 사전허가, 대학휴교, 집단적 난동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조치를 천명하였다.

그러면서도 유신관료들과 군부 고위장성들 스스로 부분적이거나 유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 30. 유신헌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고, 국회는 12. 1. 본회의에서 '긴급조치 9호 해제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12. 3. 헌법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12. 6.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2. 7. 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여 12. 8. 구속자 석방, 김대중 가택연금 해제 등이 이루어졌고, 12. 13. 국무위원 임명을 앞두고 형식적으로나마 정국안정과 헌법개정을 위한 정치일정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제안, 지원하여 이끌어갔다. 미국은 다른 제3세계의 흐름과 같이 한국에서도 노골적 폭압통치가 분노한 민중의 켈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함으로써 친미 성향이 없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송두리째 잃는 사태를 막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형식적이거나 유화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여 국민의 저항을 무마하고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줄 주도세력을 물색하였다. 미국은 치밀한 정보망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은 군부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그간의 군사적 동맹관계로 보아 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결론은, 군사정권을 다시 세우되, 민간정부의 외양을 입히는 것이었다.

## (2) 10.26 직후 미국의 정책

10.26 직후, 카터는 글라이스틴, 사이러스 밴스 미 국무장관 등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내 극소수 최고위급 관리들로 '체로키(Cherochy)'라는 암호명의 특별대책반을 만들고, 국무부와 주한미대사간에 한국사태에 대한 비밀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디스(NODIS: 인가된 사람 외에는 열람권이 없다)'라고 표기된 비밀전문을 교신하도록 하고, 글라이스틴과 홀부르크 등은 매일 수시로 이 전문을 주고받으며 미국 행정부의 대한정책을 협의, 결정하였

다.

글라이스틴은 10. 28. 09:19 <박정희 이후의 한국 상황에 대한 초반 평가>라는 제목으로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에서 “한국의 다양한 세력들이 그들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가 군부의 권력 승계에 만족해 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또한 장차 아주 영향력있는 요소가 될 군부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하여, 한국정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배력을 확인하면서 군부의 재집권 가능성과 군부와의 협조 필요성을 미 행정부에 전달하였다. 미 국방부 역시 10. 29.경 비밀전문을 통하여 한국군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대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군부가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관여할 것임을 알았다.

벤스는 10. 30. 한국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박대통령의 후계자 선출 문제는 한국의 내정문제이지만 상담을 해온다면 미국의 의견을 전할 수 있다”고 하여 차기 정권 창출에 개입할 의사를 표시하고, 11. 8.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우리는 민간정부의 지속적인 단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부분적인 계엄 결정은 세계에 한국이 민간 정부를 유지할 것임을 확신시켰다. 우리는 비밀스럽게 조언할 것이며, 공개적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겉으로는 최규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11. 14. 12:25 글라이스틴에게 보낸 비밀전문에서 “그들은 이미 반대세력을 통치할 능력을 빼앗겼고 그 반대세력은 대중선동에 능숙한 자들이다”라고 하여 최규하 정부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우려를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의 말들이 공표되지 않고 또 당신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여 드러나지 않게 한국의 내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미치도록 지시하였다.

홀부르크는 12. 4. 글라이스틴에게 보낸 전문에서 “말할 것도 없이 아무도 ‘또 하나의 이란’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1979. 11. 24. 명동 YWCA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일명 YWCA 위장 결혼식 사건)과 관련하여, 계엄령 철폐를 요구했던 재야인사들의 행동을 “비교적 한 줍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계 과격파 반정부운동가들로 보이는 자들의 행동”으로 매도하고, “반정부세력들은 미국의 정책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계엄령과 긴급조치 9호 해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미묘한 시점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도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국민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글라이스틴에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한국민의 행동을 배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글라이스틴은 12. 7. 07:02 <정치지도자들과의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에서 “그들은 정부에 너무나 적대적이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 외에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 나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들의 모임에서 그들이 별다른 일 즉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하여, 민주화를 요구한 정치인들이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는 인상을 미 행정부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비밀전문 내용을 통하여도 드러나듯이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는 한 마디로 한국에서 또 하나의 이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신군부의 등장은 10.26 직후 더욱 활발히 가동된 미국의 정보수집활동의 결과 이미 예견된 것으로, 미국은 그들의 집권 방식을 문제삼지 않았고, 반면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진압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 (3) 12.12 군사반란의 실행

박정희의 비호 아래 성장한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은 10.26 직후 유신헌법 조기 폐기에 반대하고 전두환 스스로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박정희 피살사건을 수사하면서 합수부의 권한 및 자신들의 군내 지위와 관련하여 군고위장성들과 대립하다가, 1979. 12. 12.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여 반란함으로써 권력의 실세로 등장하였다.

전두환은 수도권 지역 주요 군지휘관들인 신군부 핵심세력을 규합하여, 박정희 피살사건 수사 명목으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12. 12. 19:15경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하고 부관을 사살하고, 총리공관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경비병력을 무장 해제시켜 총리공관을 무력장악하고 재가를 거부하는 최규하에게 집단으로 몰려가 사후재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최규하가 재가를 거부하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신군부를 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1공수여단(여단장 박희도)은 12. 13. 01:00경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였으며, 3공수여단(여단장 최세창)은 특전사령부를 점령하고 상관을 체포 살해하고,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반란참여자들은 수경사에 모여있던 육군본부 지휘부를 체포하고 상관을 살해하였으며, 전방에 배치되었던 제9사단(사단장 노태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아래 있으면서도 그 승인

없이 서울로 이동하여 중앙청을 점령하였다.

신군부는 군사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반란한 후, 대통령을 위협하여 사후승인을 받아 합법절차로 위장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허울 뿐인 것으로 만들고, 이로써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신군부는 대통령과 내각을 임의로 조종하면서 실질적인 최고권력집단으로 행세하였다.

#### (4) 미국의 12.12 방조

위협은 신군부의 반란행위가 시작된 직후 12. 12. 23:00경 용산 미군 병커에서, 주요 시설을 지키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수도기계화사단과 26사단에 서울시내에 진입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모든 행동을 자제하고 기다리라고 하여, 신군부의 반란행위를 묵인하고 반란행위를 완료할 시간을 주어 방조하였다.

카터와 밴스는 12.12 직후 글라이스틴에게 전두환과 만날 것을 지시하고, 글라이스틴은 12. 15. 전두환을 만나 그의 성향을 확인하여 밴스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밴스는 이를 토대로 12. 16. 03:01 <당신과 전두환과의 토론>이라는 비밀전문을 글라이스틴에게 보내 “군부가 와해되는 것을 피하는 것과 민간 지도력에 의한 민주정부를 향한 운동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 단계의 목적이다”라고 말하여 군사반란을 주도한 신군부를 약화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고, 다시 12. 28. 09:42 <12.12에 대한 두 번째 평가>라는 비밀전문을 글라이스틴에게 보내 신군부의 보수적 성향이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a) 정치개혁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도구로서 최규하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하라 (b) 새로운 한국군 집단과 교섭하라 (c)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하였다.

글라이스틴은 1980. 1. 26.경 신군부 지도자들을 만나 “군지도권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하여, 신군부의 반란행위를 지지하였다.

## ■ 범죄행위

### 1. 내란 :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 (1) 신군부의 군대투입계획

1980년 봄, 국민 각계각층의 민주화의 열망은 사북탄광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조건설운동, 학원민주화운동으로 불붙어 계엄령 해제요구로 모아졌다. 5. 14. 신민당은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5. 15. 서울역에서 10만여명의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5. 16. 오전에는 공화당도 계엄해제시기를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학생 지도부는 강경진압과 군 투입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결정하고 당분간 거리 시위를 하지 않기로 하여, 곧 국회가 개회되면 계엄령 해제 문제가 본격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정하고, 2. 18.부터 정호용 특전사령관, 박준병 20사단장 등 신군부 핵심요인들의 산하 부대에 소요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3. 6. 충정회의를 소집하여 군의 투입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한 응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4. 21. 사북탄광 광부들의 임금인상요구에 특전사 소속 11공수여단 62대대를 M16 소총과 화염방사기로 무장시켜 투입하였다. 4월말경에는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통합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과 조직구성 초안을 마련하여 권력을 장악할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신군부는 또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고 시위를 강경진압하기 위하여, 5. 3.에 9공수여단을 수도군단에 배속시킨 것을 시작으로, 5. 6.에는 11, 13공수여단을 이동시켜 거여동과 김포에 배치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날부터 부산 및 대구 일원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해병 1사단 2개 연대를 투입할 계획을 협의하고, 5. 13. 경장갑차를 차출하고, 5. 14. 13:50경 소요진압본부를 열고, 5. 15. 12:00경 보병 제20사단 61, 62연대를 잠실종합운동장과 효창운동장으로 이동시켜,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전에 이미 군을 동원하여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짓밟을 치밀한 준비를 마쳤다.

#### (2) 비상계엄 전국확대

신군부는 5. 17. 11:00경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시국수습방안을 결정하고, 18:00경 이화여대에서 회의 중인 학생대표들을 체포하고, 각 군부대에 충정작전실시를 알렸다.

12.12 당시에도 신군부로부터 협박당하여 반란행위의 합법적 외양을 만들어주었던 최규하 대통령은, 이번에도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안을 비상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라고 내락하였다. 5. 17. 21:42 소집된 비상국무회의에서,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과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북한의 동태와 전국적 소요사태로 계엄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무회의실 복도에 착검한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도열시키고 국무위원들이 외부와 전화통화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묵시적으로 협박하였다. 그 결과 국무회의는 21:50경, 일체의 반대토론 없이 회의 시작 후 8분만에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의결하였고, 신군부는 합법적 절차의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협박으로 당시 대한민국 헌법에 정한 국무회의의 계엄선포에 관한 심의권한을 정지시킨 것이다.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곧 신군부의 전면등장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였다.

신군부는 시국수습방안에서 대통령의 국회해산 및 초헌법적 비상기구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대통령의 반대로 불가능해지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연금, 계엄군 병력의 국회점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 제10호 발령 등을 통해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켜 당시 대한민국 헌법에 정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무력화하였다.

신군부는 5. 17. 20:00경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김대중, 문익환 등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소요 배후조종 혐의로 체포하고, 야당 주요 정치인을 가택에 감금하였으며, 주요 대학 학생회 간부에 대하여 이른바 '예비검속'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총 2,669명을 체포하였다. 또한 24:00경 군대를 동원하여 전국의 주요 대학을 점령하고 시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들까지 무차별 구타 연행하여, 국민의 저항을 잠재워 위헌적인 계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신군부는 서울에 신군부의 핵심부대인 1, 3, 5, 9, 11, 13 공수여단과 보병 20사단을 투입하고, 광주에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 모두 700여명의 공수부대를 진주시켰다. 또한 전주에 7공수여단 31대대를, 대전에 32대대를 배치하고, 부산과 대구에 해병 제1사단 각 1개 연대를 투입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건 즉각 적지침투작전과 충정훈련으로 단련된 공수여단과 20사단으로 강경진압할 태세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유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였다.

또한 신군부는 5. 18.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0호를 공포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완전히 제한하고, '5. 17. 계엄지역 확대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 지침'을 계엄사 보도검열단에 시달하여 이에 따라 보도통제를 시행하여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였다.

신군부는 나아가 5. 18. 01:45부터 33사단을 동원하여 M16소총 등을 휴대하고 장갑차와 전차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여 8. 30.까지 국회의원 등 일체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5. 20. 10:00경 이미 소집공고된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을 소총으로 밀어내었다. 또한 10. 27.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10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종료시켜 국회를 해산시킴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헌법기관으로 계엄해제를 의결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 (3) 신군부의 권력장악

신군부는 5. 27.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을 의결하게 하여 외관상 대통령 자문·보좌기구라는 형식으로 국보위를 설치하였고, 전두환은 그 상임위원장으로 기구의 위상과는 무관하게 국보위에서 국정 전반 조치들을 결정하고 각 행정부처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9. 27.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신군부는 10. 22. 현존 정당의 전면 해체, 제10대 국회의 해산, 새 국회 구성시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국회권한 대행, 구정치인의 정치활동규제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켜 공포하고, 국보위를 개칭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 권한을 대행하여 입법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원칙과 선거에 의한 입법기관 구성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또한 신군부는 10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군 정보수사기관인 보안사 주도 하에 언론통폐합조치를 마련·실행하고,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주도 하에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고, 박정희 피살사건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판결에서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대법원판사 양병호 등을 보안사에 연행 조사하여 사직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다가, 1981. 1. 24. 24:00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신군부의 행위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를 강경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무장병력으로 위협적 상황을 조성한 후 예비검속 및 체포, 구금, 국회봉쇄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보위를 설치하여 이를 입법기관화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고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헌법에 정한 국민주권의 원칙과 대의제도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을 유린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행위이다.

#### (4) 미국의 동조와 협의

미 국방부는 1980. 2. 27. <특전사의 부대위치와 주요 인물>이라는 비밀전문을 통해 특전사가 국내 치안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5. 8. <현 학생사태와 군대 투입에 관한 수도경비사령관의 발언>이라는 비밀전문을 통해 노태우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정부는 학생들에 대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학생 사태에 군대를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위진압을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늦추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음을 보고받고, 미 행정부는 5. 13. 위킴의 전두환 면담 결과 “전두환이 국내정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다”고 보고받아, 전두환이 실권 장악을 기도하고 있으며 군투입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글라이스틴은 5. 9. 10. 17.<한국 초점 : 긴장 조성파 학생들이 제기하는 주제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으로 크리스토퍼에게 전문을 보내 전두환과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날 것임을 알리고, “나는 그들과의 회동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 군으로 경찰력을 보장하려는 한국 정부의 비상 계획을 미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크리스토퍼는 같은 날 20:57 <한국 초점 : 한국에서의 긴장>이라는 비밀전문으로 글라이스틴에게 “우리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회신하여 신군부의 군대투입에 동의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글라이스틴은 또 5. 9.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미국은 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의 비상대책이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기 위하여 군대를 투입하는 데 찬성할 것임을 신군부에 알리고, 머스키 국무장관(1996년 사망하여 기소하지 않음)은 5. 13. 글라이스틴과 전두환, 최광수의 만남에 만족을 표시하여 군투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 (5) 미국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보유

군의 구성과 운용은 주권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필수적이고, 군통수권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다른 사람 특히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외국의 침략에 대응하여 발휘되는 군통수권의 성격상, 그 실질적이고 원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군 지휘 체계가 한국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은 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일체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는 “지구상 유례없이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를 실행하였고,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은 계속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1978. 11. 7. 설립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연합군사령부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1954. 11. 18. 조약 제34호)’의 규정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1954. 11. 17. 조약 제1152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가지므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응하여 한국을 방위하는 책임을 진다. 위 교환각서 상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다.

연합사령관은 1980년 당시 전시와 평시 모두 한국군 보병 제1, 3군단 등을 한국방위를 위하여 배치·운용할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 군인으로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의 방위에 전념하여야 할 뿐, 작전통제권을 한국의 이익에 반하여 미국 또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현직 군인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불개입 원칙에 의거하여, 작전통제권을 함부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양함으로써 그의 휘하에 있는 병

력을 한국의 정치에 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군 상당 부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할 차기 정권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군부의 강경진압작전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위하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양을 요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작전통제권을 신군부에 이양하여, 그 휘하에 있던 병력을 한국의 정치에 개입시켜 한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게 하였다.

#### (6) 작전통제권 이양과 내란 중요임무 수행

위کم은 5. 7.경 우발적 상황과 학생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특전사 휘하의 한국군 제13공수여단을 서울 거여동의 특수전센터로 이동시키고 제11공수여단을 김포로 이동시키는 것을 신군부와 협의하였다. 특전사는 특전사는 적국의 후방 지역에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훈련된 최정예부대로서, 신군부의 철저한 준비 아래 육군 보병 20사단, 26사단, 30사단, 33사단과 함께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동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을 받아왔다.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 등 주도세력이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 부대를 이동시킨 것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함)의 항의 이후 열린 5. 26.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사의 회의 결과 한국정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군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1공수특전단과 일부 예비부대와 헌병대의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이래,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될 때에도 특전사는 육군 제2군단,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한미간의 공고한 군사공조관계에 기반하여 특전사의 작전상황과 이동상황까지 모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였으며, 연합사 역시 치밀한 정보망을 통하여 특전사의 훈련내용까지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위کم은 신군부가 군을 동원한 시위진압계획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알면서도, 5. 13.과 14. 주한미공군과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공군 및 해병대 항공단의 신예기들과 한국공군기, 약 7천 4백여명의 한미지상군 병력을 동원하여 '코프 제이드 80II'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면



서, 가상 적기를 상대로 한 방공작전, 후방으로부터의 물자 및 병력지원을 차단하는 차단훈련, 실무장 투하훈련, 공중정찰·탐색 및 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신군부에게 공조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미 국방부는 이미 5. 15. 18:45경 <한국 학생시위>라는 비밀전문으로 30사단 트럭 일부가 세종로 등에 배치된 것을 보고받아 시위진압을 위한 신군부의 군대투입시기가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5. 16. 08:39 <한국군과 학생소요>라는 비밀전문으로 김대중의 체포가 임박하였음을 보고받아 파악하였다.

그러나 신군부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온 미국은, 12.12 군사반란 이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치밀히 준비해 온 신군부가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군을 동원하여 강경진압하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파괴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여 내란행위의 실행에 들어가자, 미국은 위컴으로 하여금 그 작전통제 하의 한국군 부대 중 대규모 병력을 신군부의 강경진압에 사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단기간내에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양하는 방법으로 계엄실시에 필요한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내란의 성공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위컴은 5. 16.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소요사태 악화에 따른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한국군 제20사단의 제60연대와 포병단의 작전통제권을 이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이를 승인하고, 5. 17. 20:55경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이미 주영복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포항에 주둔한 해병 1사단을 시위진압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 및 부산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통제권 이양요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 휘하의 해군구성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양을 명령하였다.

미국 관리들은 국무회의의 계엄확대 의결이 있기 전인 21:30에 이미 청와대로부터 다음날 0시를 기하여 전면계엄령이 실시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미 국방부는 비밀전문을 통해 5. 18. 한국 정부 관리로부터 국무회의의 계엄확대 의결이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신군부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경우 이 병력이 불법적 계엄령실시에 사용될 것임을 명백한데도 계속하여 한국측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함으로써 신군부에 대규모 계엄병력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비상계엄 실시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곧, 위컴은 5. 21. 그날 0시부터 계엄확대에 따른 수도권주둔을 위하여 30사단 90연대, 91연

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다음날 0시부터 수도권 주둔을 위하여 26사단 73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모두 한국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 휘하의 한미야전군사령부에게 소요진압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그 부대전개위치 및 도착완료시간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유병현 합참의장으로부터 매일 그 이후의 군부대 동향을 보고받고, 유병현으로부터 주한미공군이 보유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배치를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글라이스틴은 5. 23. 12:00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화당과 신민당의 유정희 국회의원들과 만나 “카터 대통령은 유럽,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보다 한국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본 대사의 보고는 직접 카터에게 전달되고 있다. 미국은 5.17 조치의 배경과 불가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안정과 경제안정을 위해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여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 강경진압작전을 적극 지지하고 신군부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공언하였다.

#### (6) 계속된 지지와 협조

전두환은 5. 29.경 주요 언론사 발행인, 편집인, 편집국장들과 만나 “미국이 12.12사태, 자신의 중앙정보부장 서리 임명, 5.17 등에 대해 모두 한국으로부터 사전 통고받았다”고 말하여, 신군부의 내란행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과시하였다.

광주진압직후인 5. 29. 백악관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홀부르크는 “상황이 더욱 명확해질 때까지 군부장성들을 성급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 군부가 민간 정치인들과 대화를 열지 않고 보다 광범한 지지를 받는 정부형태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이 회의의 결론에 관하여 “현재의 한국 사태는 인권문제가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유지를 바라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관한 문제”라고 발언하여 이 회의에서 신군부에 대한 협조입장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카터는 5. 31. CNN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의 판단으로는 공산주의의 침략과 전복으로부터 한 나라의 안보를 유지하는 일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일에 선행한다. 우리는 우리의 맹방이나 무역 상대국이 단지 우리의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단교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소련의 영향력에 내줄 수는 없다.”고 하여, 미국이 앞으로도 자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군부의 내란행위에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위کم은 7. 24.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미 육군협회에서 연설하면서 “한국은 동북아 안보를 위한 열쇠”라고 말하고, 8. 7.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바라고 있는 한국민은 전두환 장군의 영도력에 국민 각계각층이 따르고 있다. 한국의 안보와 국내안정은 정치발전에 우선하며, 전두환을 비롯한 한국군부와 미군장성들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훌륭하다. 나는 대다수 한국민은 기와집에 살면서 전기가 들어오고 직장이 있으며 밥상에 밥만 오른다면 아주 유순하고 복종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의 민주주의가 한국에 적합한지 또는 한국민이 그러한 민주주의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위کم은 또한 자신과 글라이스틴은 10.26 이후 미 행정부에 충분히 조절된 정치군사면의 정책보고를 해왔으며, 워싱턴에서 수립된 정책은 근래 수 개월간 주한 최고 당국자인 두 사람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과 엄밀히 일치한다고 하고, “전두환이 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권좌에 오르고 한국민으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보이면서 이곳의 안보상황을 위태롭게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다. 그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하고, “전두환을 선두에 세워놓은 대열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마치 들쥐와도 같이 하나의 진영을 갖추어 모여들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위کم 스스로 자신과 글라이스틴이 미 행정부의 신군부 지지와 협조를 결정·실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신군부가 합법의 외양을 갖추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2. 광주학살 1 : 5. 18.에서 5. 21.까지

### (1) 광주학살의 시작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 실시되자, 서울과 다른 도시에서는 더 이상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역 회군 이후인 5. 16.에도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비상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확대 직후인 5. 17. 자정을 전후하여 7공수여단이 전남대, 조선대 등지에서 무차별적인 체포, 구타를 자행하자, 18일 오전부터 이에 항의한 학생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신군부는 5. 18. 08:00경 각 지역에 배치된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광주에서 소규모의 학생시위가 계속되자 이를 초기에 강경진압하기 위하여, 그날 12:00경 광주에 특전사 병력을 증파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서울에 투입되었던 특전사 병력 대부분을 광주로 이동시켜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만행을 자행하였다. 또한 광주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완전히 통제하고 기사삭제로 남은 공간까지 다른 기사로 채워넣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신군부의 학살만행을 철저히 숨겼다.

## (2) 신군부의 유혈진압

### ① 5. 18. : 피의 일요일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된 직후인 5. 17. 23:00경, 광주 505보안부대는 광주시내의 재야인사와 학생회 간부들을 예비검속하여 합동수사본부에 감금하고, 5. 18. 01:10경, 특전사 7공수여단 33, 35대대는 M16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거하면서, 시위와 무관하게 교내에 남아있던 고시반 학생 등 5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진압봉과 군화발로 마구 구타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5. 18. 08:00경, 불법적인 폭행과 체포에 분노한 전남대생 30여 명이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이기 시작하여, 10:00경에는 2백여 명의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자, 공수부대원들은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이들을 쫓아가 진압봉으로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대검으로 위협하였다. 조선대학교와 전남의대에서도 같은 시각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수백여 명의 학생들은 11:00경부터 14:00경까지 광주 시내 중심지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여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주동자를 검거하였다.

그러나 12:00경 광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라 한다) 등으로부터 광주의 시위

상황을 보고받은 신군부는,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시위에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 사태를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서 학생시위가 민중봉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의 저항을 가차없이 분쇄할 의지와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신군부는 이를 토대로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계속 추진하려고 한 것이다.

신군부는 12:00경 광주에 공수부대를 증파하기로 결정하고 서울 동국대학교에 주둔한 11공수여단 3개 대대를 광주로 파견하는 한편, 15:30경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를 시위진압을 위하여 금남로 일대에 출동시켰다.

7공수부대원들은 16:00경부터 20:15경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시위대 해산에 머무르지 않고 M16소총에 총검을 꽂고 시위대로 돌진하여 인근 점포나 골목, 건물 안까지 추적하여 체포하고, 시위대와 시민 누구든지 진압봉과 개머리판으로 무차별하게 머리와 온 몸을 구타하여 쓰러뜨리고, 시위와 무관한 사람과 저항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남녀노소 구별없이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짓밟으며 대검으로 찔러 실신시키는 등 야만적 폭력을 휘둘렀다.

공수부대는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만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민가에까지 들어가 40-50대 장년층까지 무차별 구타하였으며, 여성들도 예외로 하지 않았다. 특히 여학생들의 상의를 벗기고 구타하는 성적 폭력을 자행하였다.

이른바 '피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7공수여단의 과잉진압으로, 광주시민 405명 이상이 체포 연행되고 김경철(남, 23세)이 후두부열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하였으며, 80여명이 상해를 입었다. 광주시민을 본보기로 철저히 짓밟아 잠재우려 했던 신군부의 작전은 거칠 것 없이 진행되었으나, 이날의 피는 이미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생존을 위한 저항의 씨앗을 뿌렸다.

## ② 5. 19. : 만행

5. 19. 05:00경 11공수여단이 광주에 증파되고, 아침부터 61대대는 시내 주요파출소와 시위 예상 지역을 점령하고, 62, 63대대는 장갑차를 앞세워 차량으로 시내를 질주하며 위력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전날 공수부대의 만행이 속속 알려지고 부상을 입은 시민 김경철이 사망하자, 분노한 광주시민들은 10:00경부터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11공수여단은 시민들을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대검으로 찌르는 살상행위를 감행하여, 김안부(남, 34세)가 전두부열상 등으로 사망하고, 이용찬(남, 20세)은 못매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에 이르는 등, 수많은 시민이 부상당하였다.

12:00경 11공수여단의 주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조선대로 철수하자, 공수부대의 야만적 살상행위를 목격하고 격분한 시민들은 그 공백을 이용하여 다시 금남로 등 시내 일원의 거리로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연 이틀이나 공수부대의 만행에 대해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은데 격분하여, 카톨릭센터 지하차고에 있는 전일방송의 취재차량 2대를 끌어내 불태웠다. 5. 21.까지, 신군부는 모든 언론에 광주상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였던 것이다.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없이, 14:00부터 17:00까지 작전지도차 광주에 내려와 있던 2군사령관 진중채는 공수부대에 <군 충정작전지침 추가지시>를 내려 '바독판식 분할 점령, 조기에 분할 타격 체포, 도피방지책 강구, 과감한 타격' 등을 명령하여, 11공수여단 61, 62, 63대대와 7공수여단 35대대는 이에 따라 14:50경부터 금남로와 한일은행 앞 등에서 강력한 진압작전을 벌였다.

15:40경 7공수여단 33대대도 시내에 투입되어 모두 5개 대대가 광주 시내에서 대대적 진압작전을 벌여, 16:40경 61대대는 대인동 공용터미널 앞에서 가드레일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돌을 던지는 수 천명의 시위대에게 장갑차를 돌진시켰고, 17:10경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장갑차 1대가 시민들에게 포위되자 공수부대 장교가 장갑차 문을 열고 엠16소총을 난사하여 김영찬(조대부고 3년)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날 공수부대는 빈번히 대검을 사용하고 심지어 발포까지 하며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최승기(남, 20세)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대검으로 여성의 유방을 난자하고 시민을 찢러 살해하는 공수부대의 만행은 광주시민을 항거하지 않고는 안될 지경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미 06:30경, 3공수여단 5개 대대를 광주에 증파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저녁 서울의 주둔병력을 속속 광주로 내려보냈다. 신군부는 여기에서 그칠 의도가 없었다. 광주시민을 살육하고 승자가 되는 것이 신군부의 목적이었다.

③ 5. 20. : 대격돌

이틀 동안의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공수부대를 몰아내야함을 깨닫고 10:00경부터 시내로 몰려들었다. 10:20경 금남로 카톨릭센터 앞에서 공수부대에 붙잡힌 30여명의 젊은 남녀가 팬티와 브래지어만 걸친 알몸으로 기합과 구타를 당하는 등, 공수부대의 야만행위는 이날도 계속되었다.

이날 오후, 신군부는 시위 진압에 소극적인 정웅 31사단장에게서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공수부대의 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신군부의 핵심인 진중채 2군사령관,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을 직접 광주로 내려보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3공수여단은 12:00경 충장로와 도청 등에서 장갑차를 앞세우고 진압작전을 개시하여 충돌이 격화되었고, 15:00경 시위 군중은 이미 3만에 이르렀고, 3개 공수여단 10개 대대 병력이 총동원된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각목, 쇠파이프, 돌, 화염병 등으로 공수부대에 저항하였고, 18:00경 지난 이틀 동안 공수부대의 만행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운수노동자들 약 200명이 모여 “시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군 저지선을 돌파하자”고 의논하고, 19:00경 금남로에서 200여대의 차량을 몰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일제히 경적을 울리면서 서서히 도청을 향해 전진하는 차량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자 공수부대는 차량시위를 막기 위하여 최루탄을 발사한 뒤 돌격조가 차량대열로 뛰어들어 유리창을 깨고 진압봉과 대검을 마구 휘둘러 운수 노동자들을 구타 학살하였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19:30경 공용터미널 방면에서 약 1만여 명의 시위대가 차량을 앞세우고 매일경제신문사 앞에서 공수부대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였고, 20:20경 노동청 앞, MBC방송국 앞, 공용터미널, 전남대 앞 등에서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에게 공수부대가 포위당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공수부대는 만행은 멈추지 않고 더욱 격화되었다. 23:00경 광주신역 앞에서는 3공수여단 12대대가 차량을 앞세운 시민들과 공방을 벌이다 M-16 소총을 발포하여 김재화(남, 25세)에게 좌측 흉부-우측 흉부 관통 총상을 입혀 살해하고 10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총상을 입

했다. 같은 시간에 세무서 앞에서도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하여 발포하고, 조선대학교 앞에서는 33대대가 조선대 실내체육관에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5. 21. 00:30경 수류탄을 투척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신군부 역시 한 번 시작한 작전을 중단하지 않았다. 신군부는 광주시민의 저항을 유발하여 결국 수세에 몰린 공수부대를 전술상 일단 광주 외곽으로 빼내고 진압 병력을 증파하여 적당한 시기에 더욱 강력한 시위진압작전을 펼치기 위하여, 20:00경 군부의 핵심인물인 박준병이 지휘하며 충정훈련을 계속하여 온 20사단 병력 3천여명을 광주로 파견하였다.

#### ④ 5. 21. : 살육

연이어 도를 더해가는 공수부대의 만행에 격분한 시민들은 밤새도록 시위를 벌였고, 5. 21. 새벽 3공수여단은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광주 신역에서 전남대로 철수하고,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은 조선대로 밀려났다. 공수부대는 이제 도청 부근만을 지키고 있었다.

동틀 무렵, 광주 신역에서 3공수여단이 미처 치우지 못한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 시민들은 시신에 대형 태극기를 덮어 손수레에 실어 “전두환을 찢어죽이자!”는 플래카드를 걸어 도청으로 행진했다. 시민들은 08:00경부터 금남로 카톨릭센터 앞에서 11공수여단에 맞서, 10:00경 10만여명이 금남로를 가득 메우고 불과 30미터 거리를 두고 장갑차를 앞세운 공수부대와 대치하면서 광주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고, 도지사는 공수부대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시민들을 무마하려 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이날 오전, 관계지휘관들을 불러 계엄군을 광주 시내로부터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하고, 20사단 전부를 광주에 증파하며, 폭도소탕작전은 5. 23.이후에 의명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군부는 동시에 광주의 시위대를 무장 폭도로 규정하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를 허용하여, 공수부대는 이날 그야말로 살육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16:00경에야 내려진 철수명령에 따라 시 외곽으로 물러났다.

도청 앞에서 시민들과 대치한 공수부대가 12시가 지나도록 철수하지 않자, 시민들이 12:50경 장갑차를 앞세우고 트럭과 버스로 그 뒤를 따라 공수부대를 밀어붙여 공수부대의 저지선



이 무너지자, 13:00 정각 갑자기 애국가가 방송되면서 공수부대는 일제히 옆드려썩 자세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하였다. 인근 전일빌딩, 상무관, 도청, 수협 전남도지부 건물의 옥상에서도 이미 배치된 저격병들이 10여분 동안 메가폰으로 사격중지 명령이 내릴 때까지 시위대 열 선두의 주동자들을 겨냥하여 총격하였다.

금남로는 피바다를 이루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자들을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들마저 저격병들의 표적이 되었다. 거리에는 피와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13:30경, 한 청년이 장갑차를 타고 태극기를 흔들며 “광주 만세”라고 외치는 순간, 총격으로 쓰러졌다.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에 5-6명의 청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전두환은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고 외치다가 총격으로 피를 쏟았다. 그리고 같은 광경이 반복되었다. 옥상의 저격수들은 주변 건물의 창으로 이 광경을 내다보는 사람들에게까지 총격을 퍼부었다. 금남로의 살육으로 박민환(남, 26세) 등 약 54명 이상이 총상으로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총상을 입었다.

공수부대는 한 번 든 총을 내리지 않았다. 14:00경 전남대학교 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져온 경찰 가스차를 앞세워 전남대 쪽으로 전진하는 시민들에게 일제사격을 실시하고, 가스차에 수류탄을 던져넣고, 부상당한 시민들을 전남대로 끌고갔다. 3공수여단은 시위자를 추격하여 인근 주택가를 수색하면서 안두환(남, 45세) 등 민가에 있던 시민을 무차별 구타하며 끌고가 광주교도소 부근에 가매장하고, 남편을 마중나갔던 임신 8개월의 최미애(여, 23세)의 머리를 정조준하여 사살하는 등, 무차별한 살상을 자행하였다.

총상자들로 병원이 가득차고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헌혈을 하겠다며 병원으로 모여들었다. 광주는 이제 공수부대로부터 절멸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15:15경, 드디어 시민들은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공수부대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인근 도시의 파출소에서 칼빈과 M1소총을 확보하고 도청으로 나아갔다.

사태가 악화되자, 신군부는 16:00를 기하여 3개 공수여단의 작전지휘권을 공식적으로 정읍사단장의 31사단에서 전교사로 넘기고, 윤희정 전교사 사령관을 예편시키고 소준열을 전교사 사령관에 임명하여, 신군부 스스로가 진압작전의 공식선상에 나섰다. 또한 서울에 남아있던 20사단 60연대를 마저 광주로 이동시켰으며, 광주상황에 대한 보도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언론매체로 하여금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 보도하도록 하였다. 신군부는 이제 작전을 바꾸어, 국민들에게 광주상황을 왜곡전파함으로써 광주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물리적으로 외부와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여 시위의 확산을 막다가 일시에 대규모 부대의 힘을 집중시켜 광주항쟁

을 분쇄하기로 한 것이다.

공수부대는 16:00에 주둔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철수과정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살상을 멈추지 않았다. 16:00 광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은 공수부대 중 11여단 병력은 17:50 경 화순군 주남마을 일대로 철수하던 도중 마을 주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헌혈을 마치고 돌아가던 박금희(여, 16세) 등 여러 명을 살상하였다.

전남대에 주둔하던 3공수여단은 연행된 시민들을 싣고 광주교도소로 철수하여 이들을 감금하고, 19:00경 시작된 의곡도로 봉쇄작전에 따라 통행을 차단하고 차량과 행인에게 총격을 퍼부어, 귀가하던 임은택(남, 35세) 등을 사살하고 수 명의 시민들에게 총상을 입혔다.

22:10경에는 광주 서구 백운동 소재 효천역 부근에 배치되어 광주-목포간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20사단 61연대 2대대가 버스 등 차량 6, 7대에 탑승하고 목포 쪽에서 오던 차량시위대에게 집중 난사하고, 시위대가 항복의 표시로 손을 들고 일어서 옷을 흔들었는데도 다시 총격을 가하여 약 9명의 시민을 사살하였다.

신군부는 광주시민 모두를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이며 진압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총상을 입히는 등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총칼로 위협하여 중대한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살해죄를 범하였다.

또한 신군부의 광주시민에 대한 만행은, 전혀 무장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하여 보도블록을 짊 돌과 집에서 들고 나온 연탄 짐게 등으로 신체를 보호하려고 한 민간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의도적으로 이들을 살해하고,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한 것이다. 신군부는 위법한 계엄령에 의하여 영장도 없이 또는 시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무차별하게 체포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들을 구타하고 고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유방 등을 대검으로 공격하는 등 신체의 특정 성적 부위에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 (2) 미국의 공모와 협조

글라이스틴은 광주의 각종 정보망을 통하여 18일 이후 벌어진 학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